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0일, 박대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4.11.27.)

상정, 심사, 의결(수정)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2.10.)

상정, 심사, 의결(변안)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대출의원)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 정의(§3)① - (생략) (제1호~제16호) <u><신설></u> - (생략) (제17호~제20호) ○ 외국환중개업무 등(§9) -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항) 1. <u>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u> 2. <u>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u> 3. <u>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u> -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함)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제2항) - (생략)(제3항) -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히 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u>	○ 정의(§3)① - (현행과 같음) (제1호~제16호) -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제16호의2) 가. <u>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u> 나. <u>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u> 다. <u>그 밖에 기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u> - (현행과 같음) (제17호~제20호) ○ 외국환중개업무 등(§9) -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항)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함)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함(제2항) - (현행과 같음)(제3항) -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히 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u>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u>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행	개정안
<u>예탁</u>하게 할 수 있음(제4항) - (생략)(제5항) -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자본시장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음. 이 경우 “<u>금융투자업자</u>”는 “외국환중개회사”로, “<u>금융투자업</u>”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봄(제6항)	하게 하는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u>를 할 수 있음(제4항) - (현행과 같음)(제5항) -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u>금융투자업자</u>” 또는 “<u>금융상품판매업자</u>”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u>금융투자업</u>” 또는 “<u>금융상품판매업</u>”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봄(제6항)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u>제37조부터 제39조까지</u>, 제44조, 제54조, <u>제55조</u>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개정안은 현행 전문금융기관등 간의 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으로 정의하면서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중개업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¹⁾”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16호²⁾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금융기관 간 거래만 중개하는 기존 외국환중개업무(일반외국환중개업무)와 차이가 있음(자료 : 기획재정부)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뿐만 아니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조문의 경우는 준용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항).

정부는 2023년 2월 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무역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에 걸맞도록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3가지 핵심과제로 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② 대(對)고객 외국환 중개업 도입 및 ③ 개장시장 연장 등을 제시함.

이 중 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은 시행령 개정³⁾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
- 나.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을 통해 개선('23. 10.)하였고, ③ 개장시장을 연장하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규제⁴⁾를 통해 개선('24. 7.)함.

다만, ②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현행법에 규율되지 않은 업무로서 도입근거 마련 및 타법과의 관계 정비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동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현재 전문금융기관등 간 거래하는 은행 간 시장에서는 서울외국환중개·한국자금중개 등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가격정보가 집약되고 주문접수 및 체결 등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고객 시장은 은행 간 시장과 달리, 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중개회사가 없는 상황임.

[현행 은행 간 시장 및 대고객시장 구조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개별 고객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가 제시하는

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 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다.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라.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시장참가자들의 자율 협의체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에서 결정함.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은행 간의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글로벌 외환시장은 대고객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발전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가 생길 경우, 회사가 각 은행별 시스템딜러로부터 호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면,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대고객 거래에서 전자중개 플랫폼⁶⁾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고객외국환중개 관련 홍콩·싱가포르 금융당국의 인가 사례]

구분	홍콩	싱가포르
특징	▶ 홍콩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가 필요	▶ 싱가포르내 법인에 대해 자국기업 여부,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2종류로 구분하여 라이선스 발급
인가요건	▶ 임원의 자격, 자본금(5백만 홍콩달러), 적절한 회계·관리 시스템 등	▶ 사업계획, 트랙레코드, 임원의 전문성, 최소 자본금, 리스크관리 역량, 기업지배구조 등
주요 인가 업체	▶ 360T, 블룸버그, Currenex, EBS, 로이터 등 31개사	▶ 360T, 블룸버그, 로이터, EBS 등 67개사

자료 : 기획재정부

이에 개정안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여 고객의 가격선택권

5) 김한수(2021),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01, pp. 2-4.

6) FXGO(블룸버그), 306T(Deutsche Boerse), FXall(로이터) 등

확대와 거래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후 시장구조]



자료 : 기획재정부

또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일부 조문⁷⁾은 준용토록 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전문금융기관등의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거래상대방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9조제1항제2호는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정의를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자’가 고객인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인

7) [참고] 참조

지, 중개회사인지가 불명확함.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이 ‘정의’, ‘거래 상대방’ 및 ‘의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 제9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거래 상대방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그 대강을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⁹⁾에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환중개회사가 성실한 업무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하는 조치가 현행 대비 많아지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을 논

8) 「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납입자본금의 20%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⁰⁾.

그런데 개정안은 보증금 예탁에 더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중개회사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늘어날 소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 규정은 현행법 제8조제7항¹¹⁾의 규정과 구조가 유사한데 제7항의 규정은 2017년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전제가 되는 정부제출안¹²⁾ 당시 빠져있는 조항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임이 인정¹³⁾되어 신설된 바 있다는

10) 「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9. 30.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002557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용 조문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9조제6항에서는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2009년 1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당시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환중개업무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신설되었음. 다만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기 위해 준용규정도 함께 마련됨.

이후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도록 추가되었음. 다만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제도가 없었기에, 전문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규정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용규정은 없는 상황이었음.

1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9. 30. 정부제출) 소위자료 안제8조 중

다양한 외환이체업자의 등장으로 인해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은행이 외환이체를 전담하고 있는 현재보다 파산, 지급불이행 등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업자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에 부여되는 책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예탁하는 등의 이용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이체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참고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도입될 경우, 전문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용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새로이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준용 조문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모두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타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후 외환·금융당국이 준용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용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준용조문을 모두 규정한다면 「자본시장법」 제71조1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및 제47

14)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

조15)가 추가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원화표시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외국환평형기금(§13¹⁶) - 한국은행은 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등록(「국채법」에 따른 등록을 말함)을 할 수 있음 (제13항) - 한국은행은 제1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3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전자증권법」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함 (제14항) ○ 부칙 - 시행일 : §13^⑬ 및 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제1조) - 유효기간 : §13^⑬ 및 ⑭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제2조)

16)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개정안은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에 발행되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17’)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상의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¹⁸⁾을 위해 1967년 설치된 기금으로, 원화와 외화를 보유하면서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 상승(원화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補填)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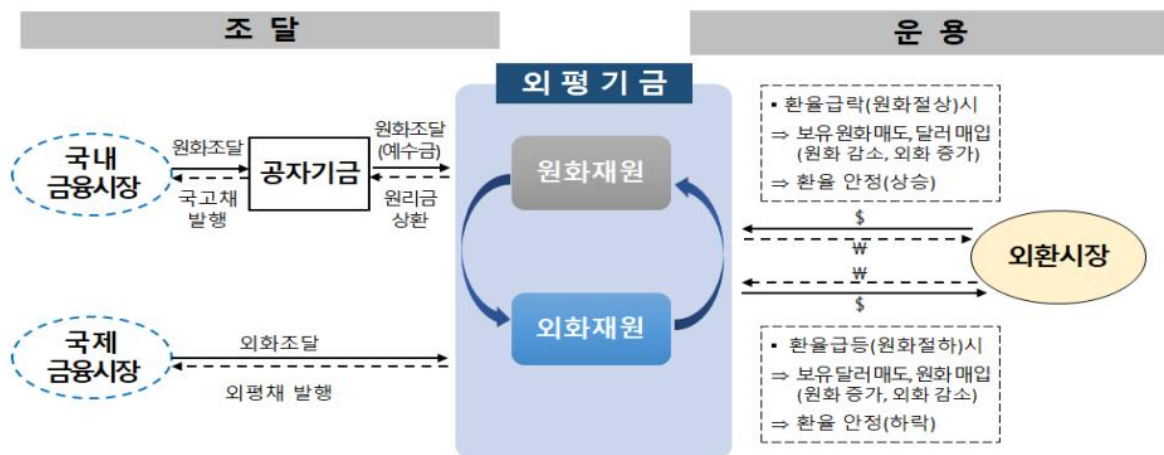
17)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크게 국고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재정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등이 있음.

18) 「**외국환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절하) 시에는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가 절상)시에는 원화를 매도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외평기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음.

[외평기금 안정화조치 체계도]



자료 : 기획재정부

원화표시 외평채는 2003년까지 발행되다가 국고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3년 11월 국고채로 통합되었고, 2008년 말 원화표시 외평채가 상환 완료된 후 2009년부터는 외화표시 외평채만 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원화표시 외평채를 21년 만에 다시 발행하기 위해 18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편성¹⁹⁾하

였고, 18조원 규모의 금액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음.

그런데, 「전자증권법」이 2016년 제정되어 2019년 시행됨에 따라 주식, 사채 뿐만 아니라 국채 역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 및 전자등록이 되도록 규정²⁰⁾되었고(전자증권제도), 해당 법령에 따라 한국

19) 기획재정부 소관 외화환평형기금 내 세부사업명 : 「국공채수입 사업」(81-811)

[2024년도 국공채수입 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국공채수입 사업(81-811)	3,483,000	3,483,000	19,690,000	16,207,000	465.3
- 원화표시 외평채수입	-	-	18,000,000	18,000,000	순증
- 외화표시 외평채수입	3,483,000	3,483,000	1,690,000	△1,793,000	△51.5

20) 「전자증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 거. (생략)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주식등의 발행 및 등록을 수행하고 있음²¹⁾.

다만, 「국채법」²²⁾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및 제9조

21) 「전자증권법 부칙」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승인,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예탁결제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발행한 예탁증명서 및 같은 법 제318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같은 법 제319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수익자증명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전자등록증명서 및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 제8조(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 1에 대하여 전자등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2) 「국채법」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

(등록국채의 이전)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채를 국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감안하여 「전자증권법」 제72조에서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사항이 규정²³⁾됨. 이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전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전자증권법」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계좌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상속·합병 등을 원인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의 포괄승계를 받은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계좌간 대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 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발행은 한국은행이, 기타 공사채의 발행은 예탁결제원이 각각 담당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증권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 채권의 발행 사무는 기존에 담당하였던 기관이 각각 수행기로 한 데서 나온 규정임²⁴⁾.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채 발행 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국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현행 국고채 등의 발행 및 유통 체계]

구 분	국고채, 재정증권 (국채법§8, 전자증권법 §25·30·72)	
등록주체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등록	국채등록부	전자등록계좌
발행	예탁결제원 명의	소유주 명의
유통	예탁결제원 명의	명의 변경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법률 제정 당시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화표시 외평채는 발행하고 있지 않았기에, 「전자증권법」 제72조가 규정될 때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만 제1항 각 호로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여타 주식등은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법」 제25조에 따라 소유주 명의로 등록하여 발행하고, 제30조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여 유통하는 데 반해, 국고채 및 재정증권은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더하여 「전자증권법」 제72조의 특례규정 및 「국채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채등록부에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등록하여 발행 및 유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24) 한국은행, ‘증권업무 해설’, 2021. p. 326.

[현행 국고채 등과 여타 주식등의 발행 및 유통 체계]

구분	국고채, 재정증권 (국채법§8, 전자증권법 §25·30·72)		원화표시 외평채 (국채법§8, 전자증권법§25·30)		여타 주식등 (전자증권법§25·30)
등록주체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등록	국채등록부	전자등록계좌	국채등록부	전자등록계좌	전자등록계좌
발행	예탁결제원 명의	소유주 명의	소유주 명의	소유주 명의	소유주 명의
유통	예탁결제원 명의	명의 변경	명의 변경	명의 변경	명의 변경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원화표시 외평채는 현행 「전자증권법」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 모두 소유주의 명의로 등록하여 발행하고 유통 시에 명의를 변경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 경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국채법」에 따라 인수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평채를 등록하면 「국채법」과 「전자증권법」에 따른 등록 내용이 상이할 수 있고, 어느 쪽의 내용을 우선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더해, 만일 법 개정 없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의 전산시스템 예산 확보,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만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한 18조원 한도의 원화표시 외평채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이에 개정안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뿐만 아니라 원화표시 외평채에 대해서도 여타 국채의 발행 및 등록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외국환거래법」에 두려는 것으로, 원화표시 외평채 역시 여타 국채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채권의 발행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통일성을 고려할 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및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전자증권법」 개정사항인 것으로 보임.

현행 「전자증권법」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 전자등록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한국은행이 국고채 등을 발행 및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업무도 「전자증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실제 동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전자증권법」 제72조 내용과 거의 일치함.

[「전자증권법」과 개정안의 비교]

「전자증권법」	개 정 안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⑬ 한국은행은 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등록(「국채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⑭ 한국은행은 제1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3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증권법」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만일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업무에 대해서만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 및 법률의 명확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효기간 이내에 「전자증권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검토의견과 동지의 입장에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

안」²⁵⁾이 2024년 10월 21일 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경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나, 동지의 내용으로 발의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전자증권법」의 주무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는 「전자증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그 밖의 자’에서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하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전자등록 및 발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로 정무위원회 소관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

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04호). 동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참고사항이 기재됨.

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상 동 내용을 삭제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이 ‘정의’, ‘거래 상대방’ 및 ‘의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전자등록 및 발행과 관련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804호)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그 밖의 자”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나. 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함(안 제13조 및 안 부칙).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그 밖의 자”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 으로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 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 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 을 갖추어 기획재정 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 ----- ----- ----- -----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1. 외국통화의 매 매·교환·대여의 중개	1. 일반외국환중개 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	
2. 외국통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u>유흥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u>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	<u>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	--	---

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
업자"는 "외국환중
개회사"로, "금융투
자업"은 "외국환중
개업무"로 본다. 다
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
9조, 제44조, 제54
조 및 그 밖에 투
자자 보호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
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
하며, 이 경우 "금
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는 각각 "외국환중
개회사"로, "금융투
자업" 또는 "금융상
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1. 일반외국환중개
업의 경우: 「자
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
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
조, 제54조, 제55
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정

2. 대고객외국환중

개업의 경우: 다
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규정

가. 전문금융기관

등과 외국환중
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

등 외의 자와
외국환중개회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
조, 제17조, 제
19조부터 제21
조까지, 제22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
28조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

⑦ (생략)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 ⑫ (생략) <u><신설></u>	<u>정</u>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 ⑫ (현행과 같음) <u>⑬ 한국은행은 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명의인으로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등록(「국채법」에</u>	⑦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 ⑫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	---	--

<신 설>

<신 설>

따른 등록을 말한
다)을 할 수 있다.

⑭ 한국은행은 제1
3항에 따라 전자등
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외국환평형
기금 채권이 「주
식·사채 등의 전
자등록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소유
자의 명의로 전자
등록될 수 있도록
제13항의 등록 내
용을 전자등록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
률」 제25조 및 제
2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3조
제13항 및 제14항
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

-----. <단서
삭제>

<u><신 설></u>	<u>한다.</u> <u>제2조(유효기간) 제1</u> <u>3조제13항 및 제14</u> <u>항의 개정규정은 2</u> <u>025년 12월 31일까</u> <u>지 효력을 가진다.</u>	<u><삭 제></u>
<u><신 설></u>	<u>제3조(외국환중개업</u> <u>무 인가에 관한 경</u> <u>과조치) 이 법 시행</u> <u>전에 종전의 제9조</u> <u>제1항에 따라 외국</u> <u>환중개업무의 인가</u> <u>를 받은 자는 제9조</u> <u>제1항제1호의 개정</u> <u>규정에 따른 일반외</u> <u>국환중개업의 인가</u> <u>를 받은 것으로 본</u> <u>다.</u>	<u>제2조(외국환중개업</u> <u>무인가에 관한 경과</u> <u>조치) (개정안 부칙</u> <u>제3조와 같음)</u>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

제8호, 제445조제3호·제9호·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제4항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중 “거래한”을 “외국환중개업무를 한”으로, “명령을”을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거래한”을 “외국환중개업무를 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 16.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① ----- -----. 1. ~ 16. (현행과 같음) <u>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u> <u>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것을 말한다.</u> <u>가. 외국통화의 매매 · 교환</u> <u>· 대여의 중개</u> <u>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u> <u>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u> <u>중개</u> <u>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u> <u>관련된 업무</u>
17. ~ 20. (생 략) ②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u>다</u> <u>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u> <u>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u> <u>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자본 · 시설 및</u> <u>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u> <u>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u>외</u> <u>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u> <u>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u> <u>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자본 · 시설 및</u> <u>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u> <u>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생략)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④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제8호, 제445조제3호·제9호·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제4항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

⑦ (생 략)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	<u>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제5항</u>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다.

1. ~ 5. (생략)

5의2. ~ 5의4. (생략)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
르지 아니한 경우

7. ~ 14. (생략)

② ~ ⑤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
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
여 거래한 자

3. ~ 6. (생략)

② ~ ⑤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5의4. (현행과 같음)

6. -----외국
환중개업무를 한-----

--등 필요한 조치를-----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